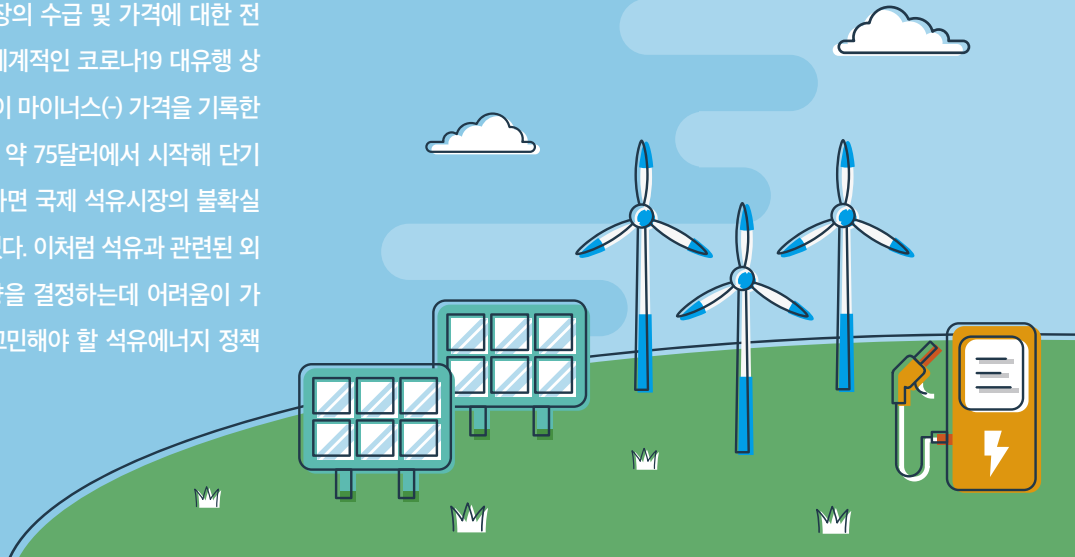


석유정책의 3가지 과제

정 준 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산업연구본부 본부장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가격을 대표하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배럴당 110~12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고유가 상황에 대한 원인과, 향후 국제 석유시장의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전망도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국제유가를 대표하는 WTI 선물이 마이너스(-) 가격을 기록한 것이 불과 2년 전이며, 올해 국제유가가 약 75달러에서 시작해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생각하면 국제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과거보다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석유와 관련된 외부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석유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나라가 고민해야 할 석유에너지 정책의 3가지 과제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고려해야 할 석유정책 과제를 3가지로 요약하면 수급안정성 확보, 가격안정성 확보 및 탄소중립과 석유산업의 관계 정립을 꼽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과제는 독립적이기 보다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첫째, 국제 석유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나라가 석유의 수급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 석유수급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미래 석유수요 예측이 필요하다. 미래 석유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기술, 자원확보,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실적이고 합

리적인 석유수요 예측은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도출되어서도 안 되지만, 현실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과도한 목표수요에 기반해서 도출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적정 석유수요가 추정되면 다음 단계로 석유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점검해야 한다. 석유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석유자원개발, 석유비축, 도입선다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국제적인 원자재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면서 석유자원개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안의 장단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원개발을 통한 석유의 공급능력 확대는 분명한 장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석유자원개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향후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석유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좌초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석유기업들이 석유개발 투자를 축소하는 것도 이와 같은 좌초자산화에 대한 우려가 원인이라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또한 석유비축량 상향 조정은 우리나라의 공급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석유를 구입 및 저장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 석유수요에 맞춰 합리적인 수준으로 비축량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 석유수요가 감소할 것이 명확하다면, 장기적으로 석유수요 감소 추세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석유비축량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석유가격안정성을 제고는 가격수준의 안정과 가격변동성 축소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에너지원의 다양성 확보를 추진해 왔지만, 2020년 기준으로 GDP 1만달러 당 석유소비가 약 5.7배럴로 주요 선진국인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것은 석유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경쟁국가들보다 우리나라 경제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석유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직면하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석유가격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석유가격의 안정화 정책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석유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휘발유, 경유,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있으며(20% → 30% → 37%), 화물차에 대한 유가운송보조금 기준단가 인하, 항공유 할당관세 적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물가상승률을 낮춰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정책들

을 제도화하여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유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유류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의 탄력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석유가격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셋째, 탄소중립과 석유산업의 합리적인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발전부문에서는 친환경에너지 확대, 수송부문에서는 친환경연료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 및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글로벌 정책방향과 보조를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2020년 ‘국가 비전 2050 탄소중립 선언’ 발표와 2021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확정과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석유산업에 대한 정책방향은 어떻게 정립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우리의 정책목표가 탄소중립인지 석유산업의 퇴출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 연료 및 연료의 전환 등으로 석유에너지 사용에서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공급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석유에너지를 무조건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므로 향후 탄소중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석유산업과 동행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2021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를, 1차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석유의존도 감소가 예상되고 있지만, 석유의 수급 및 가격 불안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우리는 합리적인 석유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더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며, 깨끗하게 석유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